규제 준수 분석 통합 보고서

생성일: 2025년 10월 23일

1. 사업 정보

항목	내용
업종	배터리 제조
제품명	리튬이온 배터리
원자재	리튬, 코발트, 니켈
제조 공정	화학처리, 고온 가공, 조립
직원 수	45명
판매 방식	B2B, 수출

2. 분석 요약

2.1 규제 현황

• 총 규제 개수: 4개

• 우선순위 분포:

• HIGH: 3개 (즉시 조치 필요)

• O MEDIUM: 1개 (1-3개월 내 조치)

• O개 (6개월 내 조치)

• 카테고리 분포:

• 제품 인증: 2개

• 안전/환경: 2개

2.2 리스크 평가

• 전체 리스크 점수: 8.2/10

- 고위험 규제: 4개
- **즉시 조치 필요**: 3개

3. 규제 목록 및 분류

3.1 제품 인증

3.1.1 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

우선순위: HIGH **관할 기관**: 산업통상자원부 **적용 이유**: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용품으로 분류되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
주요 요구사항:

-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출고 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- 수입 제품은 통관 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
근거 출처:

• [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] 안전인증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,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.

3.1.2 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

우선순위: HIGH **관할 기관**: 산업통상자원부 **적용 이유**: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린이 제품에 사용될 경우 안전인 증이 필요합니다.

주요 요구사항:

- 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-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안전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.

근거 출처:

• [법령 > 본문 >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]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...

3.2 안전/환경

3.2.1 🔵 폐기물 관리법

우선순위: MEDIUM **관할 기관**: 환경부 **적용 이유:**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가 필요합니다.

주요 요구사항:

-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재활용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.

근거 출처:

• [법령 > 인용조문 3단비교]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

3.2.2 🔴 산업안전보건법

우선순위: HIGH 관할 기관: 고용노동부 적용 이유: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의 근로자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.

주요 요구사항:

-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.
- 위험요소를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

근거 출처:

• [녹색인증제]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.

4. 실행 체크리스트

4.1 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

- [] 국내 제조 제품 안전인증 신청
- 담당: 품질 관리 팀
- 마감: 2026-01-23

근거 출처:

- [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] 안전인증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,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.
- [] 수입 제품 안전인증 신청
- 담당: 수입 관리 팀
- 마감: 2026-01-23

근거 출처:

- [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] 안전인증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,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.
- [] 안전인증 기록 및 증빙 확보
- 담당: 문서 관리 팀
- 마감: 2026-01-23

근거 출처:

• [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] 안전인증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,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.

4.2 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

- []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신청
- 담당: 제품 안전팀
- 마감: 2026-01-23

근거 출처:

- [법령 > 본문 >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]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...
- [] 수입업자 안전인증 신청 프로세스 구축
- 담당: 수입 관리팀
- 마감: 2026-01-23

근거 출처:

- [법령 > 본문 >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]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...
- ・[] 안전인증 관련 교육 실시
- 담당: 인사팀
- 마감: 2026-02-23

근거 출처:

- [법령 > 본문 >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]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...
- [] 안전인증 진행 상황 모니터링
- 담당: 품질 보증팀

• 마감: 2026-02-23

근거 출처:

- [법령 > 본문 >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]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...
- ・[] 안전인증 증빙 확보
- 담당: 법무팀
- 마감: 2026-02-23

근거 출처:

• [법령 > 본문 >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]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...

4.3 🔵 폐기물 관리법

- · []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준수 확인
- 담당: 환경 관리 부서
- 마감: 2026-04-23

근거 출처:

- [법령 > 인용조문 3단비교]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
- · [] 재활용 원칙 준수 계획 수립
- 담당: 재활용 관리 부서
- 마감: 2026-04-23

근거 출처:

- [법령 > 인용조문 3단비교]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
- [] 증빙 및 기록 확보
- 담당: 문서 관리 부서
- 마감: 2026-04-23

근거 출처:

• [법령 > 인용조문 3단비교]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

4.4 🔴 산업안전보건법

• [] 근로자의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

• 담당: 안전관리팀

마감: 2026-01-23

근거 출처:

• [녹색인증제]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.

· [] 위험요소 평가 및 관리 계획 수립

• 담당: 위험관리팀

• 마감: 2026-01-23

근거 출처:

• [녹색인증제]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.

・[] 안전 관련 문서 및 증빙 확보

• 담당: 문서관리팀

마감: 2026-01-23

근거 출처:

• [녹색인증제]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.

5. 실행 계획 및 타임라인

5.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

타임라인: 3개월 **시작 예정**: 즉시

주요 마일스톤:

• 1개월 차: 서류 준비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1-23)

• 2개월 차: 안전인증 신청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1-23)

• 3개월 차: 안전인증 기록 확보 (완료 목표: 2026-01-30)

근거 출처:

• [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] 안전인증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,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.

5.2 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

타임라인: 3개월 **시작 예정**: 즉시

주요 마일스톤:

- 1개월 차: 서류 준비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1-23)
- 2개월 차: 안전인증 교육 및 모니터링 시작 (완료 목표: 2026-02-23)

근거 출처:

• [법령 > 본문 >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]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...

5.3 🔵 폐기물 관리법

타임라인: 3개월 **시작 예정**: 즉시

주요 마일스톤:

- 1개월 차: 서류 준비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3-23)
- 2개월 차: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준수 확인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4-23)
- 2개월 차: 재활용 원칙 준수 계획 수립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4-23)
- 3개월 차: 증빙 및 기록 확보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4-23)

근거 출처:

• [법령 > 인용조문 3단비교]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

5.4 🔴 산업안전보건법

타임라인: 3개월 **시작 예정**: 즉시

주요 마일스톤:

- 1개월 차: 근로자의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1-23)
- 2개월 차: 위험요소 평가 및 관리 계획 수립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1-23)
- 3개월 차: 안전 관련 문서 및 증빙 확보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1-23)

근거 출처:

• [녹색인증제]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.

6. 리스크 평가

6.1 전체 리스크 평가

전체 리스크 점수: 8.2/10

리스크 수준: 매우 높음

6.2 고위험 규제 (상위 5개)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

리스크 점수: 9.0/10

처벌 유형: 형사처벌

사업 영향: 영업정지 6개월

근거 출처:

• [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] 안전인증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,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.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

리스크 점수: 9.0/10

처벌 유형: 형사처벌

사업 영향: 인허가 취소

근거 출처:

• [법령 > 본문 >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]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...

폐기물 관리법

리스크 점수: 7.0/10

처벌 유형: 과태료

사업 영향: 영업정지 6개월

근거 출처:

• [법령 > 인용조문 3단비교]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

산업안전보건법

리스크 점수: 8.0/10

처벌 유형: 형사처벌

사업 영향: 영업정지 6개월

근거 출처:

• [녹색인증제]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.

7. 경영진 요약

핵심 인사이트

- 총 4개의 규제 중 3개가 HIGH 위험으로 분류되어 있으며, 리스크 점수는 8.2/10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.
- 현재 고위험 규제가 4개 존재하여, 이는 즉각적인 경영적 대응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.
- MEDIUM 위험 규제는 1개로 상대적으로 낮지만,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.

의사결정 포인트

- [] 규제 대응 팀 구성 및 책임자 지정
- []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 일정 설정
- [] 고위험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검토

권장 조치 (우선순위 순)

- 1. 즉시: 고위험 규제에 대한 전담 팀을 구성하고, 리스크 분석을 강화할 것.
- 2. **1개월 내**: 기존 규제 준수 상태 점검 및 개선 사항 도출.

3. **3개월 내:** MEDIUM 위험 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및 실행.

8. 다음 단계

• **1단계 (즉시)**: HIGH 우선순위 3개 규제 착수

• 2단계 (1주일 내):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지정

• **3단계 (2주일 내)**: 상세 실행 일정 확정 및 예산 승인

• 4단계 (1개월): 월 단위 진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

• **5단계 (분기별)**: 전문가 검토 및 보완

9. 근거 출처 모음

- [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] 안전인증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,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.
- [법령 > 본문 >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]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...
- [법령 > 인용조문 3단비교]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
- [녹색인증제]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.

면책 조항

본 보고서는 AI 기반 분석 도구로 생성된 참고 자료입니다. 실제 규제 준수 여부는 반드시 전문 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본 보고서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